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민갑룡 편집인 김영수 전화 041-968-2691 FAX 041-968-2989

권두언

방법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 조건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임형진

연구특집

학교 전담경찰관의 역할인식: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이창배

가시적 경찰활동 정도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현석

치안현장탐구

범죄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 '참여치안' - CPO(범죄예방진단팀) 추진경과와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정 김두성

외부기고

지방자치단체의 CPTED 정책현황 - 유성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사례로- 대전발전연구원 도시안전디자인 센터장 이형복

연구소 소식

연구소 소식 및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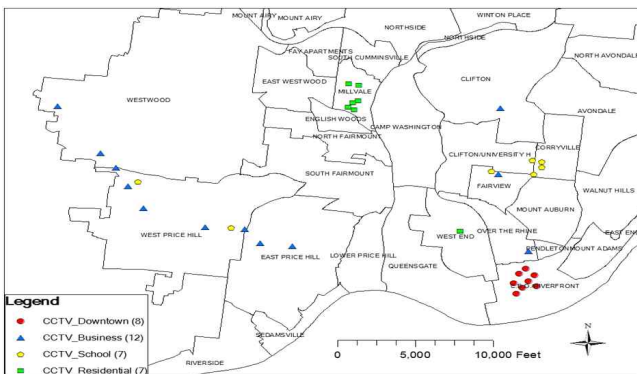
방법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 - 조건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연구관 임형진

본 연구는 최근에 범죄예방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방법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검사하였다. 특히, 방법용 CCTV의 효과가 주어진 조건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지 아니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약 3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인근 지역을 포함하면 약 150만명)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가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신시내티의 방법용 CCTV가 설치된 34개 장소(도심 8개 장소, 상업지역 12개 장소, 학교인근 7개 장소, 주거지역 7개 장소)가 직접적인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림 1> 신시내티 방법용 CCTV 설치 위치



본 연구는 범죄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론이라 할 수 있는 기회이론을 기초로 몇 가지 가설을 정하고 이를 검사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 방법용 CCTV의 주간 범죄예방효과는 야간 범죄예방효과보다 크다.

가설1-1: 주간(또는 야간) 범죄예방효과는 CCTV 설치 장소(도심지, 상업지역, 학교인근, 주거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설2: 방법용 CCTV의 주중 범죄예방효과

는 주말 범죄예방효과보다 크다.

가설2-2: 주중(또는 주말) 범죄예방효과는 CCTV 설치 장소(도심지, 상업지역, 학교인근, 주거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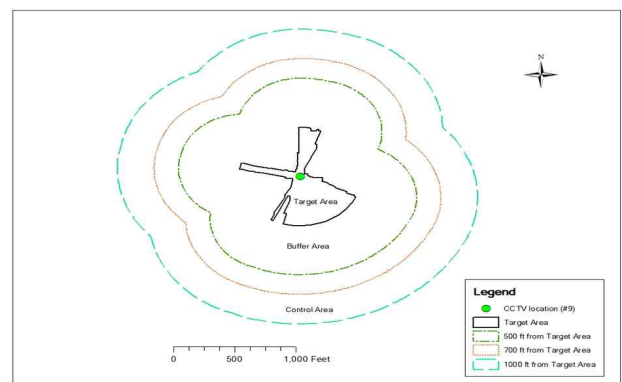
가설3: 방법용 CCTV의 강도, 주거침입절도, 차량 절도, 차량으로부터의 절도에 대한 범죄예방효과는 폭력에 대한 범죄예방효과보다 크다.

가설3-3: 강도(또는 주거침입절도, 차량절도, 차량으로부터의 절도, 폭력) 범죄예방효과는 CCTV 설치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설4: 방법용 CCTV의 설치로 인한 이익의 확산 효과는 전이효과(일명 풍선효과)보다 크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신시내티 지역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범죄사건 정보, 방법용 CCTV 정보, 신시내티 지역 전자지도, 기온 정보, 휴일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그림 2> 준실험 디자인



분석을 위해 각각의 방법용 CCTV의 설치장소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세 지역으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 지역은 목표 지역(target area)으로 방법용 CCTV가 직접

적으로 범죄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말한다. 두 번째 지역은 완충 지역(buffer area)으로 방범용 CCTV에 의해 간접적으로 범죄감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말한다. 세 번째 지역은 통제 지역(control area)으로 방범용 CCTV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는 주간범죄, 야간범죄, 주중범죄, 주말범죄, 폭력, 강도, 주거침입절도, 차량절도, 차량으로부터의 절도 등 9가지 유형의 범죄가 사용되었다. 독립변수는 2개 수준으로 나누어졌다. 1수준 독립변수로는 CCTV 설치여부, 범죄추이, 평균 기온이 사용되었고, 2수준 독립변수로는 4가지 종류의 CCTV 설치장소(도심지, 상업지역, 학교인근, 주거지역)와 기초범죄율(방범용 CCTV 설치전 범죄율)이 사용되었다. 또한, 분석방법으로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Z 검사(Z-test), 범죄전이지수(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가 사용되었다. 상세한 분석결과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이 분석결과에 의해 지지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 1-1과 관련하여, 분석결과는 이들 모든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둘째, 가설 2, 2-2와 관련하여, 분석결과는 이들 가설 중 가설 2-2의 일부인 『주말범죄에 대한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는 그 설치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만을 지지하였다. 즉, 본 연구는 주거지역에서의 주말범죄에 대한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도심지나 상업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가설3, 3-1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이들 가설중 가설 3-1의 일부인 『강도에 대한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는 그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만을 지지하였다. 즉, 강도에 대한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는 주거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해 그 효과가 훨씬 적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설 4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이를 어느 정도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다수 상황에 있어 방범용 CCTV 설치만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충분하지 않았다.

둘째, 방범용 CCTV는 특히 주말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도심지 또는 상업지역보다는 주거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셋째, 방범용 CCTV는 또한 강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상업지역보다는 주거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넷째, 방범용 CCTV는 기초범죄율이 높은 지역보다 오히려 낮은 지역에서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다섯째, 우리는 범죄예방수단으로써 방범용 CCTV를 활용할 때 전이효과에 대해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비교연구는 국가에 상관없이 주어진 조건이 비슷하면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PSI](#)

1)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Crime-Reduction Effects of Open-street CCTV: Conditionality Considerations” (Justice Quarterly; 미국 범죄학 양대저널, SSCI, 2016)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히며,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독자는 원 연구를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인식

-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이창배



들어가는 말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4대약 근절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범죄들을 설정하였고, 학교폭력은 그 중 하나에 포함된 것으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정부는 학교폭력근절대책(1995) 수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4) 시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05, 2010, 2014) 수립,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2) 발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 확대와 등/하교길 안전캠페인 활동 강화 등과 함께 대표적인 활동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이다. 시행 초기인 2012년에는 경찰관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514명의 전담경찰관을 배정하였고, 매년 그 인원을 추가하여 2016년에는 1,078명까지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제도적 혹은 법률적 측면의 연구가 많고,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증적 연구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수행하는 주요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탐험적 연구의 목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이 제도가 미국에서 처음으

로 시행되었기에 미국에서 경찰관의 주요 업무에 관련하여 설문한 자료와 한국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양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설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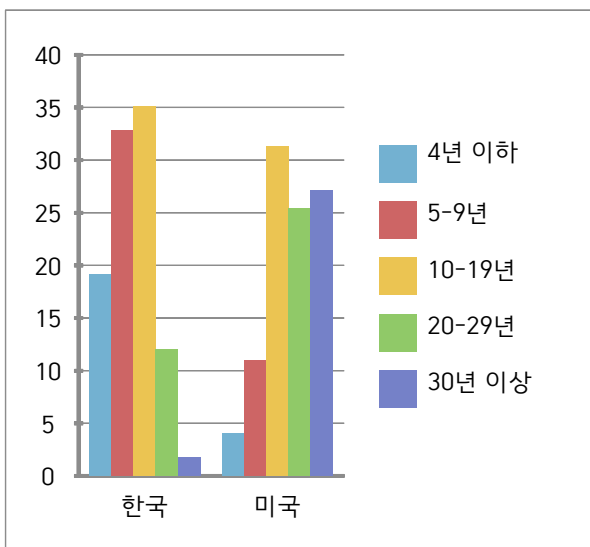
분석에 활용된 미국의 자료는 May 등(2012)이 수행한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고, 한국의 자료는 May 등(2012)의 자료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정보를 한국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May 등(2012)이 활용한 자료는 2011년에 미국의 켄터키 주의 학교안전센터(Kentucky Center for School Safety)에서 주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중 118명으로부터 수집한 것이다. 한국의 학교전담경찰관 표본은 2015년 여름 4개 지방경찰청(서울, 경기, 부산, 울산)에 소속된 학교전담경찰관 164명이 포함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항목은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로서 법집행 경찰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담 및 지원 등에 할애하는 업무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설문의 주요 결과

양국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경찰관이 많고, 미국은 비교적 연령이 높은 경찰관들의 비중이 높았다(<도표 1> 참

조). 양국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찰근무 경력의 비교에서 양국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10-19년 경력을 기준으로 한국은 9년 이하의 경력을 보유한 경찰관이 많았고, 미국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경찰관들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미국의 표본에서는 경력이 많은 경찰관들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종사하고 있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젊은 경찰관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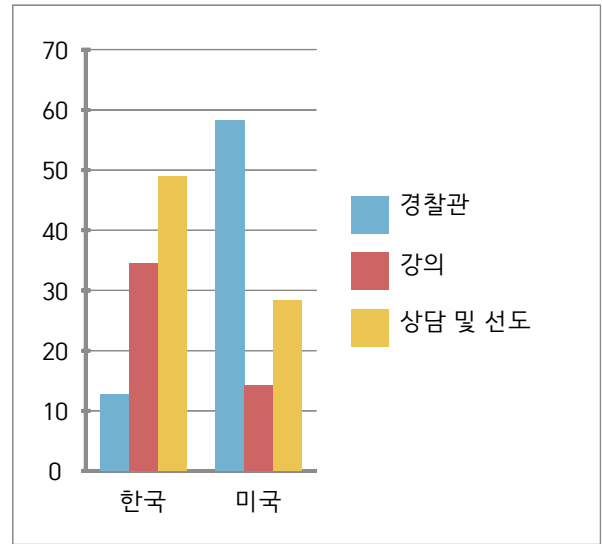
<도표 1> 양국 표본의 경찰근무 경력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자신들이 평상시에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학교폭력 예방 강의, 상담 및 지원(선도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하여 각각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설문하였다(<도표 2> 참조). 평상시 업무 시간 전체(100%)를 기준으로 각각의 역할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중을 나타내도록 요청한 결과, 한국의 경우, 세 가지 역할 중에서 상담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의 역할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응답자는 인식하였다.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역할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이었고, 평균 12%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들은 경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강의와 상담 등의 역할과 관련한 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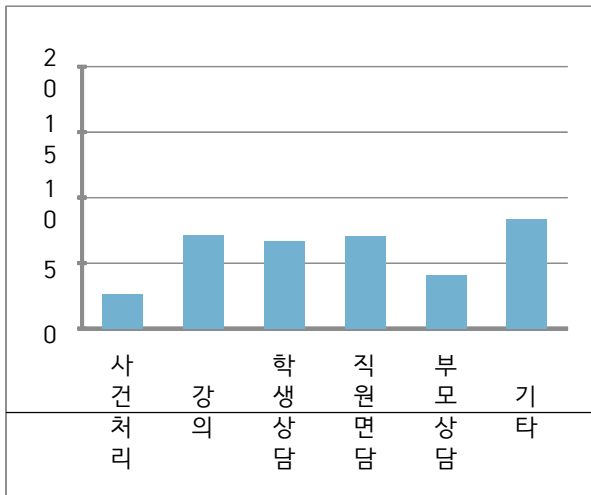
<도표 2> 양국 표본의 경찰근무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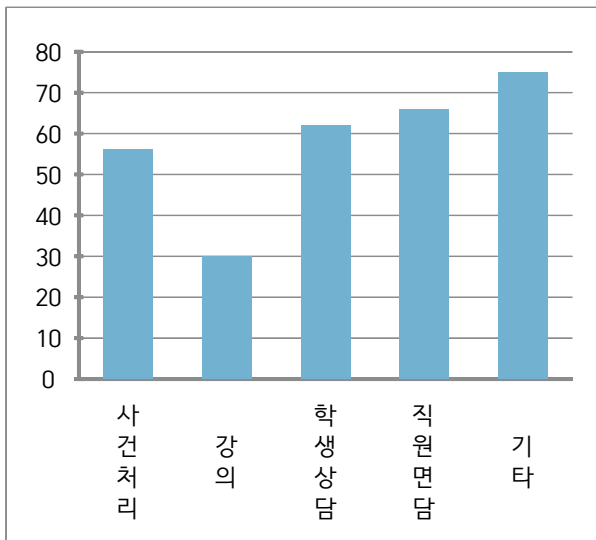
미국 켄터키 주의 학교전담경찰관 표본의 응답에서는 전통적인 법집행 경찰관의 역할에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강의와 상담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간은 전체의 50%도 못 미치는 비중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주로 수행하는 역할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수행하는 세부적인 업무의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일주일 동안 응답자가 각각의 업무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할애하는지를 질문했다(<도표 3> 참조). 한국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업무시간 중에서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는 강의와 상담 그리고 기타 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기타 업무는 선도프로그램 운영, 행사/캠페인(등하교길, 117 홍보) 활동 참여, 교내순찰, 유관기관 방문/관리, 협력단체 지원, 문서정리 및 행정업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등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사후 대응적인 활동보다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캠페인 활동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판단된다.

<도표 3> 한국 표본의 주요 수행 업무



<도표 4> 미국 표본의 주요 수행 업무



미국의 설문항목은 경찰관이 매일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각각의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응답을 요청하였다(<도표 4>). 세부적인 업무에 있어서도 강의보다 사건처리를 더 자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여준 기타 항목에 포함된 업무는 교내 순찰(주차장, 구내 식당, 복도 등), 학생 수송, 학생 수색, 싸움 중재 등이 포함되어 한국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아래는 한국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진술이다.

..... 현재 전담경찰관들의 업무난이도와 업무량은 정말 극에 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정의 정도는 너무나 경한 수준에 불과하다. 가정, 학교 등 모든 집단의 다름문제도, 캠페인 행사 등 모든 기본적인 홍보활동에, 자꾸만 만들어지는 행정들로 인해 전담경찰관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부푼 꿈과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지만 지금하고 있는 일들은 보여주지 행정의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맺음말

조사 결과, 미국에 비해 한국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전통적인 경찰관의 역할보다는 학교폭력 예방 강의와 상담 및 지원 등의 역할에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제도의 시행이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이상적인 학교전담경찰관의 모형은 한국의 사례가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학교전담경찰관은 사후 대응적인 사건처리보다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강의와 상담 및 지원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는 데 대부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이 느끼는 고민과 어려움도 다소 존재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²⁾ [PSI](#)

2)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혼합측정방법의 적용”(한국범죄심리연구, 2016년)의 내용을 수정 및 발췌한 것임을 밝힙니다.

가시적 경찰활동 정도에 대한 인식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현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당연히 범죄 두려움보다 실제 범죄가 더 중요하고 경찰은 범죄예방과 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범죄 두려움은 그 자체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범죄 두려움은 개인 또는 지역사람들로 하여금 집안에만 머물게 하고 바깥 활동을 자제하게 하거나 주민들간의 신뢰를 떨어뜨려 이웃 관계를 악화시킨다(Wilson and Kelling, 1982). 따라서 범죄 두려움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범죄 두려움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소개는 본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가시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범죄 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경찰의 가시적인 도보순찰활동과 단속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이것이 범죄 두려움 수준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된 자료는 2013년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의 인구비례에 맞춰 표본을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국에서 총 1,01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또한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해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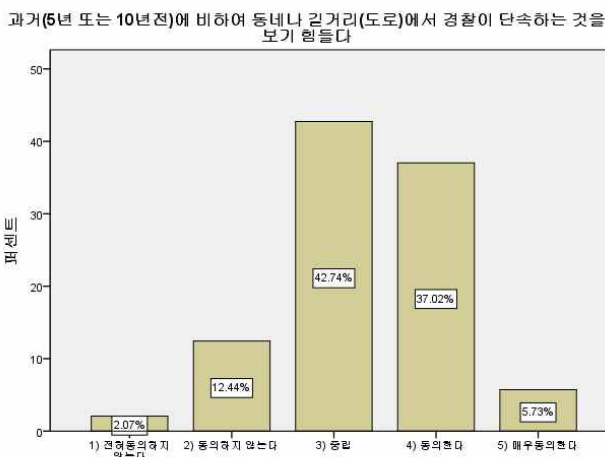
506명과 여자 507명이 포함되었다.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연령별로 고른 분포를 가지도록 표본 설계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업체가 보유한 26만 명의 전국 패널 중에서 본 연구의 표본설계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컴퓨터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택되어 이메일로 설문조사 참여요구가 이루어졌고, 설문참가자들은 온라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에 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표본선정 방법은 인구사회학적 비례에 맞춘 할당표집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인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하여 경찰활동이 가시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지 정도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최응렬·정승민(2004)의 연구에서 지구대 체제로 변화되고 난 후 112차량 순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 경찰이 무인CCTV 교통단속을 강화하면서 거리에서 차량에 대한 교통단속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시민들에게 과거에 비하여 가시적인 경찰순찰과 단속활동이 줄어든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시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측정할 때 문항을 반대로 질문을 구성하여 “과거(5년 또는 10년 전)에 비하여 동네나 길거리(도로)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 “과거(5년 또는 10년 전)에 비하여 도보로 순찰하는 경찰을 보기 힘들다” 두 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매우 동의한다”의 5 점 척도로 측정되었다(Alpha = .74). 점수가 높은 것이 낮은 경찰활동 가시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변수의 이름을 경찰 비활동에 대한 인식으로 정하였다.

분석 및 결과

<그림 1> 경찰의 가시적 단속활동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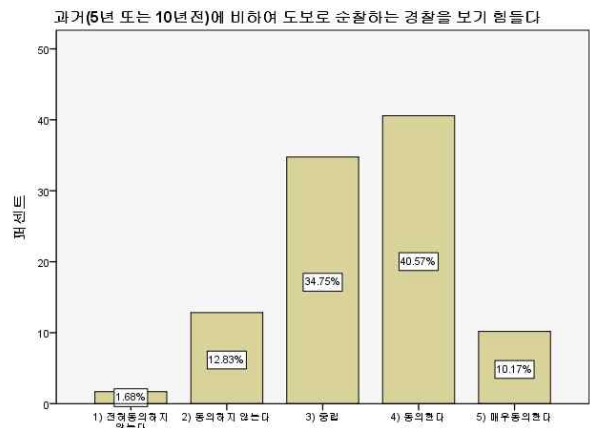


<그림 1>은 “과거(5년 또는 10년전)에 비하여 동네나 길거리(도로)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준다. 과거에 비하여 경찰이 차량이나 사람을 세워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는 것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 응답자는 42.75%였다. 전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51%로 소수에 불과하였다. 42.74%의 응답자들이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과거 5년 또는 10년 전보다 경찰이 단속활동을 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과거(5년 또는 10년전)에 비하여 도보로 순찰하는 경찰을 보기 힘들다”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준다. 도보순찰을 하는 경찰관을 보기 힘든 것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

의한 응답자가 50.74% 여서 과반을 넘었다. 전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51%로 소수에 불과하였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과거 5년 또는 10년 전보다 경찰이 도보순찰 하는 것을 보기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경찰의 가시적 도보 순찰활동에 대한 인식



연구를 위하여 경찰의 가시적 단속활동과 순찰활동에 대한 인식 점수를 더하여 “경찰 비활동에 대한 인식” 변수로 만들었다. 경찰 비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은 사람들이 과연 범죄 두려움 또한 높게 형성되는 지 알아보고자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경찰 비활동에 대한 인식과 여타 범죄 두려움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동시에 회귀분석 모형에 넣고 분석하였을 때 결과를 조사하였다<표 1>.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찰 비활동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즉 경찰이 도보순찰 또는 단속활동을 과거에 비하여 활발히 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범죄두려움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beta=0.072, p<0.01$). 국내연구 중에서 구미시 구평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시적 경찰활동이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시적 경찰활동이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지역사회경찰활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1980년대 미국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도보순찰과 단속활동이 시민들의 범죄두려움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한국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범죄두려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범죄두려움 | | |
|---------------|--------------------------|---------|-----------|
| | B | β | T |
| 경찰 비활동에 대한 인식 | .109 | .072 | 2.915** |
| 무질서인식 | .835 | .548 | 21.477*** |
| 경찰신뢰도 | -.018 | -.027 | -1.030 |
| 범죄피해경험 | .176 | .038 | 1.520 |
| 지역사회유대 | -.056 | -.093 | -3.483*** |
| 성별(남성) | -.953 | -.205 | -8.149*** |
| 연령 | -.017 | -.092 | -2.982** |
| 교육수준 | .046 | .013 | .494 |
| 결혼여부 | .263 | .055 | 1.820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174 | -.038 | -1.481 |
| 상수항 | 10.166 | | 15.500*** |
| F | 73.87 (df = 9, p <0.001) | | |
| R2 | 0.399 | |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먼저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과거 보다 우리 경찰의 도보순찰이나 법규위반 단속과 같은 가시적인 활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았는데, 중립적인 의견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과거에 비하여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보는 것이 과거에 비해 힘들어 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에 대하여 원인을 조사해 보면 첫째, 2003년 8월 지구대 체제로 전

환하면서 여러 곳에 있던 파출소를 통합하게 되었다. 기존에 동네에 있던 파출소가 문을 닫은 것이 심리적으로 주민들에게 경찰활동이 줄어들 것 처럼 보이게 했을 수 있다.

두 번째, 지구대 체제로 전환되면서 하나의 지구대가 넓은 지역을 순찰하게 됨으로 인해 기존의 도보 방법 순찰보다 순찰차 위주의 순찰에 의존하게 되었다.

세 번째, 지구대 경찰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2교대 3교대 근무를 3교대 4교대로 전환시키면서 경찰관 1인당 주간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외근 인력의 증가가 이에 맞추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1인당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산술적 계산을 했을 때 과거에 비해 순찰하는 절대 인력은 숫자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경찰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야간 시간대에 순찰인력을 집중배치하고 의무경찰관들이 도보순찰을 지원하는 등 대응책을 실시했으나 시민들이 느끼기에 과거 5년이나 10년 전에 비하여 가시적인 경찰활동이 줄어들 것 처럼 느낀 점은 우리 경찰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구대 체제로 전환할 때 우리 경찰이 주창한 것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통한 치안서비스 향상이었다(최응렬·정승민, 2004). 하지만, 진정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해 왔는지는 의문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이다(Trojanowicz and Bucqueroux, 1989). 지구대 체제로 전환 하면서 과거에 비하여 도보순찰이 줄어들고 차량위주의 순찰이 주를 이룬다면 범죄 신고에 대한 출동은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대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범죄 신고가 많지 않은 낮 시간 동안에는 차량순찰보다

각 경찰관들이 주택단지나 시장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 도보로 순찰하면서 시민들과 대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찰의 단속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많은 위반행위를 CCTV에 의존해서 진행하고 있다. 교통경찰관이 단속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단속과정에서 부정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고, 시민들이 단속하는 경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것이라는 이유로 실제 정책적으로 단속활동을 과거보다 줄여온 것이 사실이다. 경찰관의 직접적인 단속활동을 줄임으로서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경찰에 대한 만족도내지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경찰은 당연히 친절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통법규 위반이 많음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하는 운전자나 보행자는 ‘경찰은 위반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뭐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Sunshine and Tyler(2003)의 연구에 의하면 경찰이 단속행위를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었다고 단속당하는 사람들이 느꼈다면 이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

순찰과 단속은 경찰의 업무의 핵심이라고 하였다(Hess and Orthmann, 2011). 경찰이 범죄 신고나 서비스요청에 응하지 않는 시간에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업무 효율성이 달라진다고 한다(Goldstein, 1990). 미국의 켄사스시티 임의차량순찰 실험(Kansas City Random Preventive Patrol Experiment)에서 별 목적 없이 관할구역을 임의로 차량 순찰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었고 또한 범죄두려움 감소에도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Kelling et al., 1974). 목적을 가지고 순찰하는 지시순찰(Directed Patrol) 또는 문제해결지향경찰활동(Problem solving policing) 등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Eck, 2002).

단속활동의 경우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경찰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에게는 경찰이 지역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교통법규위반이나 기초질서를 위반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단속하면서 신원조회를 할 때 기초중지자나 여타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경찰의 단속활동은 처벌의 의미도 있지만, 범죄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에서 범죄두려움 감소에도 가시적인 단속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경찰은 단속활동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단속할당제나 과잉단속경쟁은 시민들의 불만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 되므로 우범지역과 사고빈발지역 등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³⁾ [PSI](#)

3)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가시적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한국경찰학회보, 18권 1호 2016년), 내용을 수정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범죄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 ‘참여치안’

- CPO(범죄예방진단팀) 추진경과와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경찰청 생활안전과 협력방법계장 김두성



전국민을 실의에 빠트렸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 통계청 조사결과, 인재(人災)(46%), 국가안보(36%), 도덕성 부족(35%) 등을 누르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49%)이 우리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큰 사회불안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 욕구를 반증하듯 각종 범죄를 비롯한 112 신고 역시 지난 5년간 50%나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 생활의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지역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11년 1,222명에서 ’15년 1,175명으로 단 47명이 감소하는데 그쳐, 급증하는 치안수요를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1> 최근 5년간 지역경찰 관련지표 현황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112 신고건수 | 9,951,202 | 11,771,589 | 19,115,619 | 18,778,105 | 19,104,883 |
| 지역경찰 1인당 담당인구 | 1,222 | 1,256 | 1,230 | 1,254 | 1,175 |

자료: 경찰청 생활안전과

그렇다면, 국민의 점차 높아지는 치안요구 충족은 요원한 것일까? 과연 현재의 범죄대응 시스템이 최상일까? 라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치안이라는 공공재는 국가(경찰)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은 수혜자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해보면 우리 주변엔 국가(경찰)외에도 범죄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존재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그동안 치안의 소비자이자 객체이던 주민 개개인,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나아가 각 정부부처 등이 함께 치안에 대해 고민하고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치안의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논의가 뜨거워진 범죄예방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활용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환경개선이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는 범죄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방법인증 등 범죄예방디자인 정책과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10년간 약 50%의 범죄감소 효과를 보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치안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경찰만의 영역이 아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합하는 참여치안의 패러다임을 적극 확산해 나가야 할 때이다. 그렇다고 경찰이 범죄예방에 대한 책임을 놓겠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범죄예방 노력에 더하여, 지역 치안의 전문가로서 지역 곳곳의 범죄취약 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정보를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각 치안의 주체들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그 기반을 마련하고 조정해 나가는 조정자이자 코디네이터

역할까지 수행해 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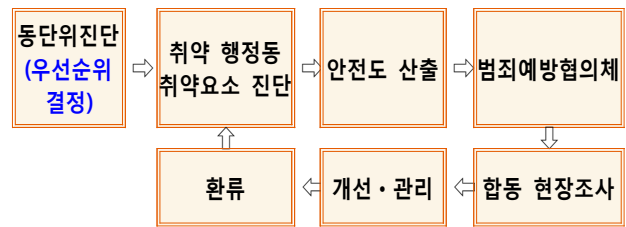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울산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11개 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을 시범운영하였고,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는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진단팀 배치를 완료(총 393명)하였다.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범죄예방진단팀’ 제도는 영국의 ‘범죄예방 담당경찰관’이나 일본·호주 등의 범죄예방시설 인증제도를 모티브로 하여 추진된 정책으로, 그간 CPTED 등 범죄예방활동이 개별 사업단위로 추진되었던 반면 진단팀은 CPTED를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실행부서로서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진단팀 업무를 단계별로 세밀하게 보면, 가장 먼저 진단팀은 범죄발생률·112신고통계와 인구이동·1인 가구·유흥업소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분석하여 ‘우선 진단지역’을 선정한다. ‘우선 진단지역’이 선정되면 이를 중심으로 △지역진단 △시설진단을 실시하는데, 지역진단은 개별 건축물이 아니라 거리와 공원 같은 블록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시설진단은 원룸, 대형마트, 편의점과 같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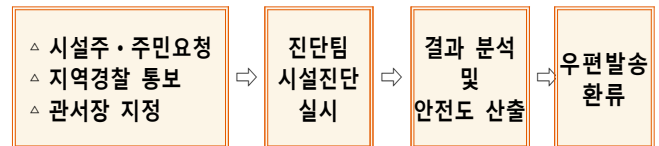
이중 ‘지역진단’ 업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범죄예방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과 투입자원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범죄예방협의체는 지역진단을 통해 파악된 범죄취약요소를 즉각적·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등 다양한 치안주체들을 포괄하여 구성한 협의체로, 이를 통해 진단팀의 지역진단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환경개선·관리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지역진단 업무 흐름도



한편, 시설진단은 원룸, 아파트, 대형마트, 공원 등 개별 시설의 범죄취약요인·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으로, 주민·시설주 및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진단결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다.

<그림 2> 시설진단 업무 흐름도



지역진단과 시설진단은 진단대상이나 세부 절차에서 일부 차이점은 있으나, 진단으로만 그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민간, 시설주, 주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예방진단팀은 기존의 경찰 중심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참여치안’ 패러다임을 그대로 담아낸 정책으로, 그 성패는 얼마나 지역사회의 참여를 잘 이끌어내느냐에 달려있다.

이제 치안은 경찰 혼자만의 영역이 아니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각자가 범죄안전을 위해 주체로 참여할 때이다. ‘참여치안’은 우리의 높아진 치안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범죄예방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해 갈 것이다. [PSI](#)

지방자치단체의 CPTED 정책현황

- 유성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사례로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안전디자인센터장 이형복



들어가며

최근 서울의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범죄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5년 강력범죄(흉악)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는 40.0건(1만9천496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에는 66.5건(3만4천1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문제를 한정적인 경찰력에 의한 단속, 범죄자의 처벌과 교육 등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해소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2005년 경찰청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제작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년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고,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개발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자체 CPTED 관련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유성구의 CPTED가이드라인 소개와 향후 가이드라인의 개선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범죄예방 대안으로서 CPTED 급부상

최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셉테드,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범죄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CPTED는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 범죄발생 빈도가 달라진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도

시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앞서 기술한 대로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경찰청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범죄예방 설계지침을 마련하였고, 2012년 서울시가 어두운 염리동의 골목길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범죄예방 디자인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상당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모법의 부재로 인해 CPTED 가이드라인 또는 설계지침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로 제작되어 행정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활성화 되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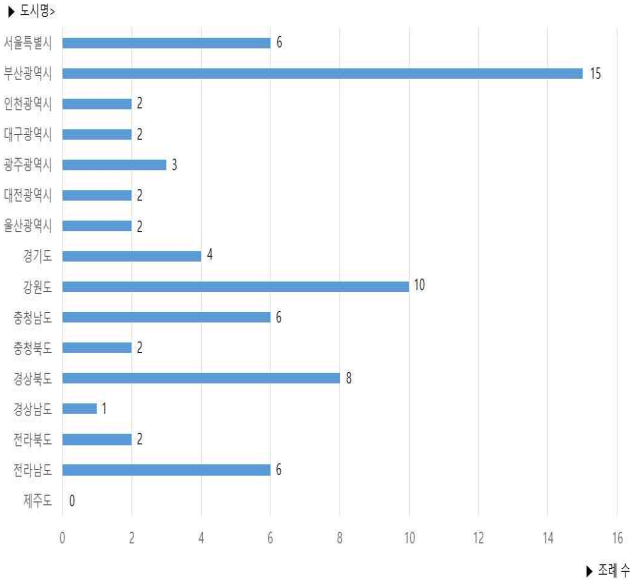
<그림 1> CPTED 개념 및 목적



제도적 기반의 보완을 위해 자구책으로나마 자주조례형태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2013년 10월 31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시작으로, 2016년 6월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60개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세종시 입법예고 중).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CPTED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산이 광역시를 포함 구군에서 15개의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림 2> 지자체 CPTED 관련 조례제정 현황



인터넷과 언론매체 상에 비추어진 CPTED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의 수립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에서 약 11개, 기초지자체에서 3개 정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 지자체 CPTED 가이드라인 및 지침 현황

| 구분 | 가이드라인 및 지침명 | 내용 |
|--------------------|--|--|
| 판교 신도시 | 판교신도시 범죄예방 설계지침(2005) | 경찰청(2005) 지침을 근간으로 작성되어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과 내용이 유사함 |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환경상세계획(2007) | 환경부문 시행지침 중 안전도시 조성계획에 반영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지, 공업용지에 대한 개략적인 지침 제시 (감시 및 접근통제 중심 전략) |
| |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2013)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일반가로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기준과 안전특화가로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기준 제시 |
|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2014) | 세종시 경관계획 수립에 있어 범죄예방환경설계 원리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함 설계요소별 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 |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본원칙 및 실행전략 제시 각 지침별 차등점수 부여 후 총 |

| | | |
|-------------------------------|--|---|
| (200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에 의한 정량적 평가 위험요소, 대상범죄유형, 기본원칙, 실행전략, 착안사항, 설계방향 및 삽도로 구성 |
| 주거 환경 관리 사업 CPTED 가이드라인(201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안전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행 : 주민참여형 재생 사업에도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주민 참여를 통해 범죄발생공간과 범죄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는 공간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지역안전지도 작성 |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201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에 대해 범죄예방환경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

| | | |
|----------|---------------------------------------|--|
| 전라남도 나주시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중 안전도시 에 관한 계획(20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용지, 공동주택 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 공공용지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지침 제시 |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범죄예방환경설계 지침(20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기타시설(상업, 업무) 지침 분류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본원리를 근거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 |
| 혁신도시 | 혁신도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20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도시별 범죄위험도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환경설계 개발 프로세스 및 방법론 제시 혁신클러스터, 주거지역, 상업업무지역, 공공시설, 학교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 서울특별시 중구 |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2013) 지침을 근간을 작성되어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과 내용이 유사함 |
| 인천광역시 |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에 따른 주요시설별 적용방안 가이드라인 제시 |
| 울산광역시 | 울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설계 적용방안 연구(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에 적용 가능한 CPTED 관련 조례 제정 용공공기관, 공동 및 단독주택, 상업 및 업무용지, 근린생활시설, 도시시설, 공원 및 녹지시설, 가로시설물, 학교 시설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 경기도 |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요소별 가이드라인 제시 공간유형에 따라 소형점포 밀집지역, 좁은 골목으로 연결된 주택 밀집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디자인 매뉴얼 제시 |
| 경상남도 양산시 | 양산시 범죄예방 관련 환경설계(CPTED)지침 (20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및 상업, 업무시설, 기타시설물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지침 제시 |

| | | |
|-----------|--------------------------------|--|
| 부산광역시 |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20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단지 신축, 재생, 가로 및 주차장, 공원 및 녹지, 어린이 놀이터 설계기준 제시 |
| 충청북도 청주시 | 청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20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요소별 가이드라인 제시 각종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 시 적용방안 제시 |
| 충청남도 | 충청남도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20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 조명, 도로, 공원, 주차장, 아파트단지, 주택 및 일반건축물, 상점 및 준주택, 공공 및 방범시설물, 커뮤니티 및 지역 안전 활동 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범죄예방 관련 조례 제정, 범죄예방 사업 도입 및 절차 소개 |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공원녹지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20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공원녹지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장애인 및 사회약자를 위한 Barrier Free Design을 함께 제시 |
| | 수원시 안전한 골목만들기 10원칙 설계 (20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기초로 하여 안전골목 10원칙 수립 10원칙에 따른 안전 체크리스트 제시 |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유성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20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요소별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도입 및 절차, 구상 및 적용예시 제시 |

가이드라인 및 지침은 수립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제작되다 보니 내용이 상이한 상태이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크게 4단계에 걸쳐서 주요내용이 구성되고 있다.

<그림 3> 지자체 CPTED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또한 앞서 살펴본 조례제정 수와 가이드라인 및 지침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첫째, 조례를 제정하고 그 근거로 용역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지자체의 일반적인 행정절차, 둘째,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사용하는 지자체도 다수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모법의 부재로 인한 행정소송 문제 및 법정계획이나 지침이 아니므로 수립지침 등의 부재로 구속력을 갖는 규정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다소 행정현장에서 기피하는 이유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CPTED 관련 행정행태를 보면 제도적인 안착을 위한 CPTED정책의 과도기적 상태라 할 수 있다.

물론 법적 측면에서는 19대 국회에서 국가 구성원 모두가 협업하여 치안의 주체로 활동하도록 하는 ‘범죄 예방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새롭게 법의 제정을 준비하는 동안 전국 각지에서 개별적으로나마 조례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최근 수립된 ‘대전시 유성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가이드라인’ 사례를 통해 구성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성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유성구는 대전시의 서북쪽에 위치한 기초자치구로서 2015년 기준 주민등록 상 340,901명, 무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5.8%의 인구증가 있었던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도안신도시, 온천관광특구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하고 있어 인구유입이 큰 도시이며, 봉명동 일대는 유흥업소가 밀집하고 있어 야간의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강력범죄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유성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및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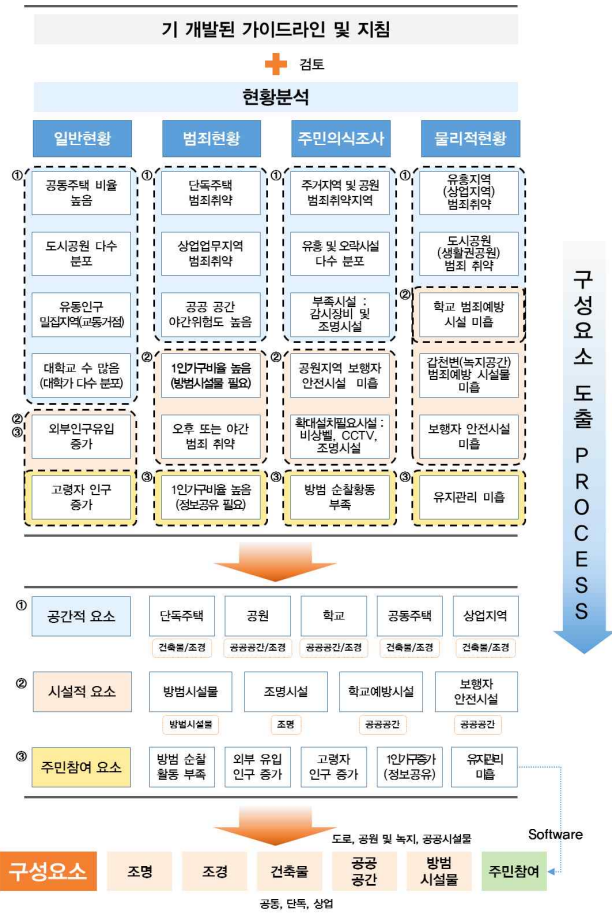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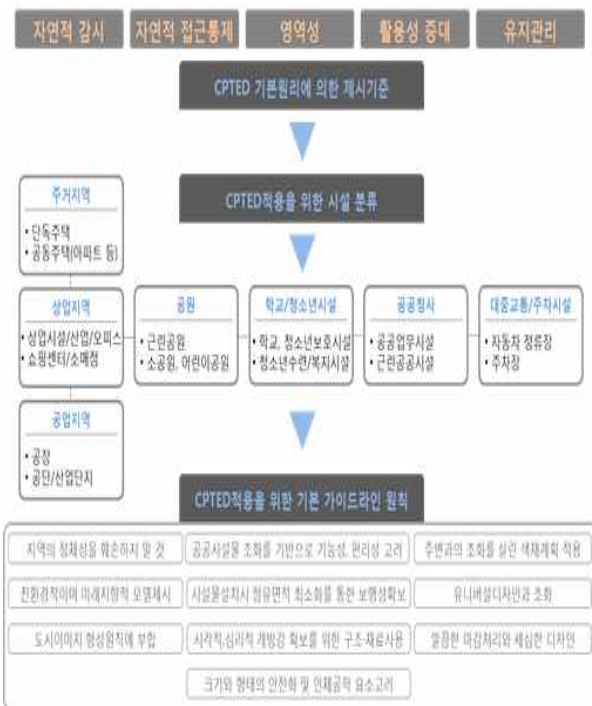
을 통하여 도시안전에 대한 유성구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한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가이드라인은 ①과업개요, ②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이해, ③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④가이드라인, ⑤시범사업으로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은 첫째로 손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유성구 범죄예방을 위해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둘째로 유성구의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셋째로 도시 기반시설 전 분야의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을 위한 체계적 방안 제시, 넷째로 범죄 주요 발생 지역인 상업지역, 주거지역 및 주요 범죄패턴 등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 개발로 설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CPTED의 기본원리인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 5개의 기본원리에 충실하여 기본방향과 구성요소를 <그림 4>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

<그림 4> 유성구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및 구성요소



맺음말

최근 늘어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자주적 조례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강제적 조항이 아닌 CPTED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시책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다소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한정된 치안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무엇보다도 범죄예방 시설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CPTED가 범죄예방의 만능이 아님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소프트웨어에도 보다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PSI**

연구소 소식

◆ 치안정책연구소 미래부 R&D 연구,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주관부처로 최종 선정

치안정책연구소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인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식별·분석기술 개발”의 주관부처로 최종 선정되었다. 연구기간은 7년, 총 예산은 489억으로 5개 부처(경찰청, 환경부, 미래부, 산업부, 국민안전처)의 참여와 협업을 추진된다.

◆ 연구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MOU 체결

치안정책연구소는 한국공공디자인학회(5월 10일), 한양대 국방생존성 기술특화연구센터(5월 16일), 전자부품연구원(6월 14일),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6월 17일)와 MOU를 추진하여 다양한 연구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 치안정책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배포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정책 및 과학기술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배포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소는 치안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진행으로 고품질 정책 발굴 및 과학치안 연구역량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경찰청 현안과제 및 정책제언 수행

치안정책연구소는 ‘아동학대’, ‘혐오범죄’ 등 총 16건의 현안연구결과를 관계부서 및 전국 총경 이상 지휘관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며, ‘문제해결 60단계’, ‘북한인권재단 수시공조’ 등 미래비전 연구도 전국 지방청 단위로 배포하였다.

◆ 치안정책연구소 세미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는 5월 10일 한국공공디자인학회와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하였고, 6월 2일에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치안 거버넌스”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6월 17일에는 북한연구학회-충남대학교와 “북한의 틈새, 사람의 공간”을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정책연구 용역과제 연구자 선정 및 착수

치안정책연구소는 3월부터 연구자를 공모하

여 6월까지 과제별 연구자선정 및 계약 완료하여 시의성있고, 필요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과제는 11월까지 연구소에서 관리하여 과학적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연번 | 정책연구 용역과제 | 금액 (만원) |
|----|--------------------------------------|---------|
| 1 | 치안빅데이터센터 설립 기본구상 | 4,800 |
| 2 | 한국범죄분류 개발 기초연구 | 2,880 |
| 3 |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결정 요인 비교 연구<한·미 공동연구> | 2,000 |
| 4 |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의 효율적 편성 운영 방안 연구 | 2,000 |
| 5 | 범죄정보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1,386 |
| 6 | 테러대응을 위한 경찰 SOP체계화 연구 | 1,499 |
| 7 | 경찰활동에서의 드론 활용방안과 그 법적 문제 연구 | 1,500 |

◆ 연구발전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치안정책연구소는 인문사회연구와 치안과학연구의 연계협력 클러스터의 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연구소로 발전하고, 미래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연구소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기 위하여 5월 12일~13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연구관 동정

◆ 권태형 연구관(과학기술연구실)은 6월 24일 구미시·한국경찰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신기술과 구미시의 도시안전’을 주제로 토론 하였다.

◆ 김윤영 연구관(사회안정·안보연구실)은 6월 17일 ‘20대 국회 탐정(민간조사)제도 도입’관련 학술세미나에서 한국적 탐정제도의 구상에 대한 사회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최근 ‘북한의 도발양상’, ‘탈북민의 집단입국’ 등과 관련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했다.

◆ 임형진 연구관(생활안전연구실)은 미국 범죄학 양대 저널인 Justice Quarterly(SSCI)에 “Crime Reduction Effects of Open-street CCTV: Conditionality Considerations” 논문을 게재하였다. [PSI](#)